

강기정 시장 “5·18은 액자 아니다, 헌법에 새겨야”

광주시·전국 단체, 25일 국회서 개헌촉구 결의대회… ‘개헌 국민추진위원회’ 구성·활동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확산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초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

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6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는 원포인트 개헌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장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을 보탤다.

강기정 시장은 “5·18은 액자가 아니라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겠다는 약속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정신 헌법전문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전광춘 기자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확대해 저소득층 복지 지원 강화 올해 4천823억 원 확보... 8천700여 가구 추가 혜택 기대

전라남도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에 따라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419억 원 증액된 4천823억 원을 확보, 8천 700여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천 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 선정 기준도 함께 상승해 4인 가구 기준은 195만 1천 287원에서 207만 8천 316원으로 확대됐다.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천 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 지원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가구 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염선호 기자

저소득자의 질병, 주택화재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다. 생계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73만 500원에서 78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2천 700원에서 199만 4천 600원으로 인상에 지원된다.

올해 저소득층 지원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급여 향상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 촘촘하게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8천 700여 가구가 기초생활 보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활성화로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설을 맞아 소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따뜻한 생활 안정을 위해 2월 생계급여 지급일을 기존 20일에서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의 교통문화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가장 높은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운전행태(55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분야(25점) 등 3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 광주 자치구 유일 교통문화 우수 지자체 선정

운전 행태 분야 전국 자치구 1위... 평가 분야 전반 우수

분야별로 살펴보면 북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판단하는 운전행태 분야에서 49.9점을 획득하며 전국 자치구 1위에 올랐다. 신호 준수를 98.4%, 방향지시등 점등률 92.9%, 정지선 준수를 88.2% 등 세부 평가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보행행태 분야는 전년도 등급 대비 3단계가 상승하며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94.5%, 횡단 중 스마트폰 미사용 준수율 91.6% 등으로 17.5점을 받았다.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도와 노력을 평가하는 행정노력도 분야는 전국 자치구 3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북구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고령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이 우수 사례로 호평받았다.

이에 북구는 전국 평균(81.34점)을 웃도는 86.36점을 획득하며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교통문화지수 A등급 지자체로 선정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평가는 주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가 지역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남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연속 최우수 기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민원행정 분야 혁신을 이끌고 있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와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와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이내 기관에게 부여하는 ‘가’ 등급을 5년 연속 받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민원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분석한 뒤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 /임채일 기자

세부 평가 항목인 기관장 민원행정 성과와 민원 취약계층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처리 노력도까지 6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실제 남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시로 접수되는 교통과 도로, 환경 등 각종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시스템을 활용,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앞서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또 주민참여 민원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정 전반의 민원서비스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우수사례 확대 전파 및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며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앞장섰다. /임채일 기자

서구, 주민 주도 독서문화 확산 나선다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 지원사업 추진... 19일까지 모집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 주도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책을 통한 소통과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올해 총 30개 독서동아리를 선발해 토론 도서와 모임 공간을 지원하고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독서동아리 서평단’과 착한 독서법을 활용한 ‘주제도서 함께읽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연말에는 우수 독서동아리를 선정해 회원들의 서평과 활동 기록을 담은 활동문집 ‘책마중’을 제작·배포하고 동아리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며 서구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 독서동아리이면서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운영하는 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록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es12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생활 독서가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 ‘책씨앗’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도 많은 독서동아리가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합평군 공고 제2026 - 99호

합평군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합평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합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기점	소로	3	76	4-8	95	월야면 월야리 소로 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 3-902	도로	-	제1900-15.8(1900) 219
변경	중로	3	A	12	95	월야면 월야리 소로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3-902	도로	-	제1900-15.8(1900) 21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76	중로 3-A	□ 폭원 및 선형변경 - 기점 : B = 4-8m, L = 95m - 변경 : B = 12m, L = 95m	□ 주민 불편 사항 개선 및 도로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제공하여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로 폭원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1. 27. ~ 2025. 2. 9.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합평군청 본청3층 지역개발과
다. 관계도서 : 계획생략(합평군청 지역개발과, 월야면사무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지역개발과 (061-320-1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 naju

2026 나주 방문의 해 캠페인 이미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now naju' 로고와 '2026 나주 방문의 해'라는 문구가 크게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QR 코드가 있다.